



보도일시

2024. 3. 28.(목) 15:00

3. 29.(금) 조간

배포

2024. 3. 27.(수) 09:00

#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 만든다.

##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 ‘창의적 공간’, ‘스마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으로 3대 공간 전환
-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
- 농촌공간계획, 농촌소멸위험지수 등 관련 제도 및 인프라 확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으며,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하였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최근 농촌에서 창업, 위케이션, 4도3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①일자리·경제 활성화, ②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③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농촌공간계획, 소멸위험지수 등 관련 제도 및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 ① 첫째, 농촌공간 및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경제를 활성화한다.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보증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IoT, 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지원한다.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sup>+</sup>)을 육성하여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충한다.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하여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 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여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전국 2.1만ha 추정)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 사용제한 지역(3.6천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 평균경사도(기존 25도 이하→30), 표고산 높이 50% 미만→60), 입목축적(시군 평균 150% 이하→180) 등

## ② 둘째, 농촌 생활인구관계인구를 창출하여 농촌의 활력을 높인다.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정주 등의 인프라를 혁신한다. 농지에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주택·농장·체험 공간 등을 갖춘 (가칭)농촌 살아가기 체험농원도 조성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지역 확대: 5개도→ 전국, 대상 확대: 50채→ 500)하고, 매매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하여 개인간 거래를 촉진한다. 농촌 빈집 정비지구 지정 및 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농촌 빈집 재생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민의 치유, 원격근무 등 새로운 수요를 활용하여 농촌에 대한 관계성을 높인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위케이션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농·산촌 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치유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여행사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시군별 테마관광상품(농촌크리에이티브)을 개발하고, 동서트레일·명품숲 조성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산촌공간을 조성한다.

농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세일즈를 진행한다. 빈집은행, 농지은행, 재능은행 등 「농촌 3대 은행」을 통해 농촌의 빈집, 농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백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 및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범국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확산 운동도 전개한다.

### ③ 셋째, 디지털 기술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농촌 삶의 질을 혁신한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인구소멸 시대 대응을 위한 농촌 서비스 공급망을 제시한다. 139개 농촌 지역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불편이 없는 농촌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기업 등 지역 주체가 주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지자체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재정 및 규제완화 등을 지원한다.

농촌지역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보완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및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하여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학교의 차별성과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간다. 농촌학교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제도 기반 마련 및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한다. 유희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농촌체험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의 체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문화·교육의 다양성도 높인다.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도 혁신한다. 농촌주민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활돌봄공동체를 육성한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문형 셔틀버스 등 수요 응답형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차량을 활용하여 이웃주민의 이동을 지원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하고, 중심지 복합SOC 시설의 민간 활용 및 마을 내 이동식 생활서비스 지원, 무인 서비스터미널 시설 등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새로운 (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근거하여(「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3.29 시행)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촌공간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마련한다. 읍·면의 인구구조, 농업·농촌경제 지표 등을 고려하여 농촌의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하고, 선택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농촌소멸대응 등 농촌정책 전담지원기관으로 광역 단위의 (가칭)농촌센터(Rural Planning Center)의 단계적 설립도 유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 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New Ruralism 2024)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인포그래픽
- 2.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요약)

|       |       |     |     |                    |
|-------|-------|-----|-----|--------------------|
| 담당 부서 | 농촌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정아름 (044-201-1511) |
|       | 농촌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문지영 (044-201-1516) |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주요내용

#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

- ✔ 농촌 청년인구 22% 유지: ('23) 21.4% → ('27) 22.0%
- ✔ 농촌지역 생활인구·관계인구 늘리기



### 전략 1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 청년 등 창업 기회 및 농촌자원 활용 확대



### 전략 2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 농촌 체류·교류 공간 및 프로그램 활성화



### 전략 3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 주민·민간 협력과 디지털 기술 활용

## 1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 청년, 혁신가, 기업 등 창업 기회 창출



- 청년농 및 다양한 농촌창업 지원
- 스마트농촌 리빙랩 프로젝트

### 농촌경제 및 Agribiz' 혁신 모델 구축



-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
-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 농·산지 활용 제고

### 농촌경제 및 Agribiz' 활성화 기반 조성



- 농촌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 자원정보 등 농촌경제 지원 체계 정비

## 2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 4D3촌 라이프를 위한 제3의 공간 조성



- 농촌 체류형 심터 도입 및 체험농원 조성
- 농촌빈집 활용 공간 재생

### 농촌·산촌 관광 활성화



- 공유형 숲오피스·치유관광 활성화
- 마을단위 관광자원 개발, 농촌관광 품질 제고

### 다양한 인재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



- 농촌 3대 은행 등 정보제공 확대
- 백만 농촌 서포터즈, 기업 등 농촌기여 촉진

## 3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 주거·일자리·서비스가 갖춰진 공간 조성



- 재생활성화지역 등 농촌공간계획 수립
- 지역 주도 주민협정 도입 및 통합지원

### 농촌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공공병원 지원 강화, 농촌 왕진버스 등
- 농촌돌봄마을,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 농촌 교육 서비스 질 및 접근성 제고



- 지속가능한 농촌학교 우수사례 확산
- 농촌공동체 협력 교육서비스 다양화

###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자립적 공동체, 스마트기술 활용 등
- 농촌자원 연계 민간역량 활용 활성화

**I 추진배경**

- 저출산·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심화가 국가 성장 잠재력 저하 초래, 지역소멸 대응이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
  - 농촌지역 소멸현상이 더욱 심각하고, 농업생산 위기, 농촌공동체 해체 및 인접 도시 연쇄적 쇠퇴 등 국가적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대응 필요
    - \* 농촌 읍·면 인구는 '22년 961만명에서 '50년 845만 명으로 감소(약 12%↓), 총인구('22대비 '50년 약 9% ↓)보다 가파른 감소세 전망
- 한편, 스마트기술 발달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으로 정주, 창업, 휴양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잠재력이 새롭게 조명
  - 쾌적한 환경, 도시대비 저렴한 비용 등으로 농촌 창업이 증가하고, 다양한 목적의 귀촌, 농촌관광, 위케이션 수요 증가

⇒ 농촌의 잠재적 가치와 국민적 기대를 바탕으로 농촌소멸 위기 완화 및 농업·농촌정책 전환 추진

**II 추진방향**

-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을 모토로 **3대 공간 전환** 추진
  - 농업 생산과 인구 유지를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전환,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되는 구조 형성
    - ① 청년층, 혁신가, 기업가, 농업인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 ② 농촌공간 테스트 베드화 등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 ③ 주거·산업·서비스 등이 집적화되고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 농촌공간계획을 플랫폼으로 새로운 농촌을 계획하고 지역주민 등 민간 역량 활용 극대화, 관련 제도 및 규제 혁신

### Ⅲ 비전 및 전략

**비전**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

- 목표**
- ◇ 농촌 청년인구 22% 유지 : ('23) 21.4% → ('27) 22.0
  - ◇ 농촌지역 생활인구 · 관계인구 늘리기

#### ◇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대전환

**전략**

**전략1**

청년 등 창업 기회 및 농촌 자원 활용을 확대하여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전략2**

농촌 체류·교류 공간 및 도농 협력 강화를 통한 생활인구 · 관계인구 창출

**전략3**

주민·민간 협력과 디지털 기술 등 활용하여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

**원칙**

자율, 연대 · 협력, 융복합, 규제혁신

**①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 청년 혁신가 기업 등 경제 기회 창출
  - 청년농 및 다양한 농촌 창업 지원
  - 스마트농촌 리빙랩
- 농촌경제 및 Agribiz+ 혁신 모델 구축
  -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
  -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농·산지 활용 제고
- 농촌경제 및 Agribiz+ 활성화 기반 조성
  - 농촌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 자원정보 등 농촌경제 지원 체계 정비

**② 생활인구 · 관계인구 창출**

- 4도3촌 라이프를 위한 제3의 공간 조성
  - 농촌 체류형쉼터 도입 및 체험농원 조성
  - 농촌빈집 활용 공간 재생
- 농촌 · 산촌 관광 활성화
  - 공유형 숲오피스 · 치유관광 활성화
  - 마을단위 관광자원 개발 농촌관광 품질 제고
- 다양한 인재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
  - 농촌 3대 은행 등 정보 제공 확대
  - 백만 농촌 서포터즈 기업 등 농촌기여 촉진

**세부 과제**

**③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

- 주거·일자리·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 조성
  - 재생활성화지역 등 농촌공간계획 수립
  - 지역 주도 주민협정 도입 및 통합지원
- 농촌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공공병원 지원 강화, 농촌 왕진버스 등
  - 농촌돌봄마을,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 농촌 교육·문화 서비스 다양화
  - 지속가능한 농촌학교 우수사례 확산
  - 농촌공동체 협력 교육서비스 다양화
-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자립적 공동체, 스마트기술 활용 등
  - 농촌자원 연계 민간역량 활용 활성화

**추진 기반**

농촌공간계획, 농촌소멸위험지수, 농촌소멸대응특별위원회

## IV 추진방안

### 1. 농촌공간 및 자원활용 극대화를 통한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 ◆ 농촌형 비즈니스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sup>+</sup>)을 활성화하고,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및 농지·산지 활용 입지수요 충족

##### □ 청년, 혁신가, 기업 등을 위한 경제 기회 창출

- (청년농) 안정적 영농 진입에 필요한 농지·자금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전문농업인으로 성장\*을 위한 교육·자금 등 지원 강화
  - \* CEO양성과정(24: 280명), 영파머스펀드(24: 200억원), 우수후계농자금(24: 500명)
- (농촌창업) 청년들의 다양한 농촌형 비즈니스\* 확산을 위해 교육, 실증 등 복합공간 갖춘 시·군별 '농촌청년 창업 콤플렉스(Complex)' 구축
  - 자원조사부터 창업자금·컨설팅 및 보금자리주택 등 종합 지원
  - \* 로컬푸드, 농촌관광, 마을 브랜드 등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 (창업·혁신 기업) 기술 실증 희망기업 대상 마을 공유자원 등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스마트농촌 리빙랩' 추진

##### □ 농촌경제 및 Agribiz<sup>+</sup> 혁신 모델 구축 및 기반 조성

- (농산업) 원료조달, 제조·가공 등 농업 전후방 산업(Agribiz<sup>+</sup>) 기반을 연계·집적화한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벨트' 구축
- (민간투자) 농촌 소멸고위험지역에 적용가능한 읍·면 단위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및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 (농지·산지) 자투리 농업진흥지역(3ha↓) 단계적 해제(전국 2.1만ha 추정) 및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3.6천ha 추정)
  -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 \* 평균경사도(25도 이하→30), 표고(산 높이 50% 미만→60), 입목축적(사군 평균 150% 이하→180) 등
- (네트워크) 창업·혁신 아이디어 확산을 위한 민간 자율 네트워크 활성화 및 특산물·문화·유희시설 등 지역자원 정보 통합 안내



## 2. 농촌 경제·체험·거주 기반 마련으로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및 농촌빈집 재생을 통한 4도3촌 라이프 확산 및 민관협력에 의한 위케이션·체류형관광 활성화

#### □ 4도3촌 라이프 확산을 위한 제3의 공간 조성

- (체류형 쉼터 등)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농지법」 개정)
  - 거주공간, 농장, 체험프로그램 등을 함께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 조성
- (빈집활용) 지역, 대상 등 빈집 활용 숙박업 실증특례 확대\* 및 매매가능한 농촌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 연계 등으로 거래 활성화
  - \* ①지역 확대(5개도→ 전국), ②대상 확대(50채→ 500), ③영업일 수 제한(300일) 폐지 등
  -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기업-지자체 합동 농촌빈집 재생 프로젝트 등 농촌빈집을 도시-농촌 교류공간으로 조성
  - \* 농촌빈집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25)

#### □ 농촌·산촌 관광 활성화

- (위케이션·치유관광) 공유형 숲오피스 조성 등 위케이션 활성화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등 치유산업 발전방안\* 마련(24)
  - \* 치유농업 시설 및 관련 농업·농촌 자원 연계,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 등
- (체류형관광) 민간의 아이디어와 자본투자를 결합한 특색있는 농·산촌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확대
  - \* 외식·지역개발 기업 등과 지자체 공동으로 지역 미식벨트와 연계한 마을단위 관광자원 개발, 민간자본 활용 등·서 횡단 장거리 숲길 조성 등
- (서비스품질) 농촌민박 규모 등 운영 요건 개선 및 농촌체험마을 시설·서비스 등급제 활성화 등 숙박 서비스·안전성 제고 지원
  - \* 위생·안전 점검 컨설팅, 객실·시설 등급 평가,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제공 등

## □ 다양한 인재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

- (정보제공) 농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 등 대상으로 빈집, 농지, 일자리 등 정보제공을 위한 「농촌 3대은행」 운영
  - \* '빈집은행'을 통한 빈집정보 제공 및 '농지은행'은 농지 매입·임대 지원, '재능은행'은 도시민 등 재능 활용 지원
- (가치공유) 백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 및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세대간·도농간 연계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
- (기여·협력) 기업들의 ESG 경영의무 기조 반영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및 농촌소멸 대응\* 활용, 지역농협 등의 도농상생 사례 확산
  - \* 농촌 교육·장학사업, 주민 복지 증진, 농촌개발 및 활성화, 민간기업과 지역 협력사업 등

## 3. 관계부처 협업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

### ◆ 어디서나 삶에 불편이 없도록 농촌공간계획을 통한 생활공간 재구조화 및 주민주도·민간협력·스마트기술 활용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 주거, 일자리,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 조성

- (공간 재구조화) 139개 시·군별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 설정 및 삶에 불편 없는 생활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 (지역주도계획) 주민제안 등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 계획수립 및 계획에 따른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한 농촌협약 제도 본격 추진
  - \*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타부처 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 투자 등 포함하여 계획 수립

## □ 농촌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공공병원) 농촌지역 거점 공공병원 시설·장비 지원 및 의료인력 보강
- (농촌형의료)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및 농촌 의료·돌봄 거점마을\* 육성,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지원 확대 등 의료 접근성 제고
  - \* 복지시설, 농장, 주민교류센터 등에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 □ 농촌 교육·문화 서비스 다양화

- **(농촌학교)** 농촌유학 활성화\* 기반 등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농촌학교 운영 모델 확산
  - \* (기존) 농촌유학센터 중심 → (개선)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등 수요자 맞춤형 확대
- **(공동체협력)** 유아 돌봄·평생교육 시설 확보 등 읍·면 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지원\* 및 농촌체험시설과 늘봄학교 연계·협력 확대
  - \*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 1개 이상 설치 목표('23~'27)
- 유휴시설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농촌주민 참여 확대 추진

## □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주민주도)** 농촌주민 생활돌봄공동체 등('24: 130개)을 통한 부족한 서비스 직접 제공, 민간협력 등 지역 여건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 확산
  - \* 반찬나눔 활동, 셀프 빨래방 운영, 집수리업체 연계 주거환경 개선 등
- **(스마트기술 활용)**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문형 셔틀버스 등 수요 응답형 운송 서비스 추진, ICT 기반 스마트커뮤니티 센터\* 구축
  - \* 보건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여 돌봄, 생활 서비스 등 제공
- **(민간협력)** 유휴시설 등 농촌자원을 연계하여 민간역량 활용 활성화

## V 추진 기반

- **(농촌소멸대응 플랫폼)** 재생활성화지역, 특화지구, 서비스 전달체계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중앙·지자체 계획 수립
  - \* 국가 기본방침('24) 및 139개 시·군 기본계획 수립('25~)
- **(제도기반)** 읍·면 인구구조, 농업·농촌경제 지표 등을 바탕으로 농촌소멸위험도 세분화하는 방안 검토
  - 광역 단위 (가칭)농촌센터(Rural Planning Center)의 단계적 설립 유도
- **(범정부 추진체계)**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21개 부처·청 참여)을 소멸 대응 중심으로 전환하고, 범부처 협력을 위한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 VI 과제별 추진 일정

| 추진 과제                              | 일정    | 소관부처            |
|------------------------------------|-------|-----------------|
| <b>1.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b>             |       |                 |
| <b>① 청년, 혁신가, 기업 등의 창업 기회 창출</b>   |       |                 |
| ○ 청년의 영농 창업 지원 강화                  | '24.상 | 농식품부            |
| ○ 청년의 다양한 농촌 창업 지원                 | '25.상 | 농식품부            |
| ○ 농촌 창업·혁신 기업 성장 지원                | '24.상 | 농식품부            |
| <b>② 농촌경제 및 Agribiz+ 혁신 모델 구축</b>  |       |                 |
| ○ 농산업 혁신 벨트 조성                     | '25.상 | 농식품부            |
| ○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 '24.하 | 농식품부            |
| ○ 농지·산지 입지 수요 충족                   | '24.하 | 농식품부·산림청        |
| <b>③ 농촌경제 및 Agribiz+ 활성화 기반 조성</b> |       |                 |
| ○ 농촌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창업붐 조성          | '24.상 | 농식품부            |
| ○ 농촌자원 활용을 위한 정보 네트워크 등 구축         | '25.상 | 농식품부            |
| ○ 농촌경제 지원 체계 정비                    | '24.하 | 농식품부            |
| <b>2.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b>             |       |                 |
| <b>① 4도3촌 라이프를 위한 제3의 공간 조성</b>    |       |                 |
| ○ 농촌지역 체류형 쉼터 및 살아보기 체험농원 등 도입     | '24.하 | 농식품부·산림청        |
| ○ 농촌빈집 정비·거래·관리 등 활용 활성화           | '24.상 | 농식품부            |
| ○ 도시-농촌 교류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빈집 재생        | '25.상 | 농식품부            |
| <b>② 농촌·산촌 관광 활성화</b>              |       |                 |
| ○ 농·산촌 워케이션 및 치유 관광 활성화            | '24.상 | 농식품부<br>산림청·농진청 |
| ○ 농·산촌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확대            | '25.상 | 농식품부·산림청        |
| ○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                   | '25.상 | 농식품부            |
| <b>③ 다양한 인재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b>        |       |                 |
| ○ 도시민 등을 위한 농촌정보 제공 확대             | '24.하 | 농식품부            |
| ○ 미래 세대 및 전 국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공유       | '25.상 | 농식품부·농협         |
| ○ 기업, 단체 등 민간의 농촌기여·협력 촉진          | '24.상 | 농식품부            |
| <b>3. 농촌 삶의질 혁신</b>                |       |                 |
| <b>① 주거·일자리·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 조성</b>    |       |                 |
| ○ 언제 어디서나 삶에 불편이 없도록 농촌 생활공간 재구조화  | '24.상 | 농식품부            |
| ○ 지역 스스로 주도하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통합 지원    | '24.상 | 농식품부            |
| <b>② 농촌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b>          |       |                 |
| ○ 농촌에 이용가능한 병의원 시설·인력 지원 강화        | '24.상 | 복지부             |
| ○ 농촌 의료분야 민간협력·방문 서비스 등 활성화        | '24.상 | 농식품부·복지부        |
| ○ 농촌주민 등을 위한 특화된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      | '25.상 | 농식품부            |
| <b>③ 농촌 교육·문화 서비스 다양화</b>          |       |                 |
| ○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체제 구축         | '24.하 | 농식품부            |
| ○ 농촌공동체 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문화 서비스 다양화    | '25.상 | 농식품부·교육부        |
| <b>④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b>               |       |                 |
| ○ 농촌주민 자조·자립 기반의 서비스 공급            | '24.상 | 농식품부            |
| ○ 스마트기술 활용을 통한 돌봄·복지·교육 서비스 확충     | '24.상 | 농식품부            |
| ○ 유희시설 등 농촌자원 활용한 민간역량 시너지 창출      | '25.상 | 농식품부            |